

##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강정인 | 서강대학교  
하상복 | 목포대학교

### | 논문요약 |

이 글은 박정희의 저작과 연설문을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보수주의 정치사상을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박정희 사상의 보수주의적 요소로서 반공과 경제발전 및 근대화 보수주의를 분석했다. 이어서 자유주의에 대한 박정희 사상을 ‘냉전 자유주의’, ‘민족의 자유’ 및 ‘개인적 자유와 인권의 팽배’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박정희 정치사상의 특징을 현대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의 특징인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했다.

---

**주제어** | 박정희, 보수주의, 근대화 보수주의, 반공, 경제발전, 냉전 자유주의, 민족의 자유, 인권, 비동시성의 동시성

---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KRF-2009-32A-B00005).

## I. 글을 시작하며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후 1979년 10월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군림한, 해방 이후 남한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정권이다. 이 시기 동안 박정희 정권은 본격적으로 한국 근대화의 시동을 걸었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했지만,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과 그 원활한 작동을 철저히 무력화시켰다(강정인 2009, 73).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 공과를 놓고 특히 시비가 분분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공로와 그것이 수반했던 가혹한 인권탄압 등 권위주의적 철권통치, 빈부격차의 심화, 대외의존성 심화, 재벌의 비대 등 경제구조의 파행화—민주화 이후 이 문제는 흔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및 분단의 고착화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팽팽히 맞섬에 따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sup>1)</sup>

이처럼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나뉘는 바, 박정희 정치사상의 보수주의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박정희 시대의 보수사상과 민주화 이후의 보수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학술적으로 그 정치적 공과에 대해 논쟁이 분분하고 현실적으로 한국 근대국가의 틀을 주조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다.<sup>3)</sup>

- 
- 1) 박정희 정권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개괄적 검토로는 이광일(1997; 1998), 김갑식(2007) 등을 참조할 것.
  - 2)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강정인·김현아(2006)와 강정인(2008; 2009)을 참조할 것.
  - 3) 이에 대해 박정희의 정치사상에서 ‘자유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 글의 일차적인 과제는 자유주의와 관련해 박정희가 생산한 정치적 담론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언술을 통해서도 자유주의에 ‘대한’ 박정희의 사상을 재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박정희 정치사상

박정희 정권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풍부하게 존재한다.<sup>4)</sup> 또한 박정희 개인의 정치사상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선행 연구가 적지 않다. 먼저 박정희의 사상과 행동을 전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전인권의 『박정희 평전』(2006)은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다룬 연구로는 가장 포괄적이고 뛰어나다. 한편 박정희 사상의 특정 측면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그의 민주주의관에 초점을 맞춘 논문들도 더러 있지만(전인권 2002; 박현모 2007; 강정인 2011)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과 연구가 가장 활발한 편이고, 특히 박정희 정권이 '진정으로 민족주의적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규범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5)</sup> 그리고 박정희 정치사상의 보수주의와 반(反)자유주의적 성격은, 그것이 당연시된 만큼 주로 박정희 시대 체제와 정책의 성격 또는 지배이데올로기를 논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지, 박정희 개인의 저술이나 연설문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분석된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체제와 정책 또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성격으로부터 유추된 사상은, 정치인 박정희가 남긴 공식적인 언설—저작 및 연설문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비로소 박정희 개인의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박정희 사상의 보수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 성격을 그의 저작과 연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그 특징을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단,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주요 서구 국가의 사상사적 전개과정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

의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다른 글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서 보수주의 및 반자유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의 관계는 민족주의를 다룬 글에서 심도 있게 고찰할 것임을 밝혀둔다.

- 4)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연구경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글로는 앞에서 언급한 문헌 외에도 전인권(2006, 395-409)을 참조할 것.
- 5) 이에 대한 개괄적 정리로는 전재호(1997, 4-12)를 참조할 것.
- 6) 물론 박정희 사상의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박정희 정권기의 지배이데올로기(또는 지배담론)를 분석하면서 반공이나 발전주의(경제개발)를 중심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적지 않다(최장집·이성형 1991; 조희연 2003; 김정훈·조희연 2003; 이광일 2003 등). 그러나 체제나 정책 또는 지배이데올로기(또는 지배담론)로부터 도출된 사상적 요소가 자동적으로 박정희 개인의 정치사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박정희의 보수주의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

무엇보다도 제2차 대전 후에 비로소 근대국가 형성의 과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한 신생 독립국인 한국 정치의 특성상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 이념적 전개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7)</sup> 이는 곧 한국 정치에 자유주의의 보수적 전개 및 사회주의의 조속한 출현,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중적 질서의 중첩적 병존’ 이라는 이념적 특성을 각인시켰다. 또한 후발국에 현저한 목적론적 변화의 특성상 ‘부르주아 없는 자유주의’ 나 ‘노동계급에 앞서는 사회주의’ 등의 현상도 출현했다. 물론 이런 차이들은 서구 근대의 ‘정상’ 적인 경험에 대한 ‘일탈’ 내지 ‘파행’ 이라기보다 이념의 전개 공간으로서 한국 정치공동체가 갖는 역사적 고유성과 정치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거시적인 특성들을 염두에 두고, 박정희 정치사상을 먼저 ‘근대화 보수주의’ 라는 개념을 통해 조명하고 이어서 그의 사상이 지닌 반자유주의적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라는 개념과 연관시켜 요약한 후 박정희의 보수주의 정치사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느꼈던 고민의 일단을 피력하며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 II. 박정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한 개인의 정치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가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가 근본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곧 그의 정치관을 살펴보는 것이 선결작업으로 요구된다.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이후 현실정치의 구체적 상황—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7)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에 초래한 특징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강정인(2010)을 참조할 것. 같은 글에서 필자는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의 특징으로 ‘민족주의의 신성화’ 를 지적했는데, 이 글의 주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에 여기서는 이를 논하지 않겠다.

유세, 연두기자회견 등—에서 야당 정치인이나 재야인사 및 학생들을 비난하며 현실 ‘정치’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고, 제헌절이나 대통령 취임식 등의 연설에서 공식행사의 취지에 비추어 민주주의나 정치에 관한 규범적 언명을 한 적도 많지만, 연설문이나 저작에서 자신의 정치관을 일반적인 명제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신시절인 1978년 4월 3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유시(諭示)〉에서의 다음의 언설은, 앞으로 제시하게 될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를 관통하는 박정희 자신의 정치관을 총체적이고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의 목적과 제도의 참다운 가치는 그 나라의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원대한 국가 목표를 착실히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슬기와 역량을 한데 모아 생산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에서든, …… 국민총화와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 방식은 우리가 당면한 냉엄한 현실이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6: 304).<sup>8)</sup>

이 연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치의 목적과 제도가 국가의 목표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박정희에게 “국가 의식”은 “정치 이전에 요구되는 것”이었다(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 1963/02/22, 1: 378).<sup>9)</sup> 국가가 정치에 선행하

8) “우리가 당면한 냉엄한 현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박정희의 사상은 또한 ‘위기의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다. 전인권은 박정희 정치사상의 이러한 특징을 “영원한 긴급상황”이라 표현했다(전인권 2006, 254-256). 이 글에서 박정희의 저작이나 연설문을 인용할 때에는, 편역상 원문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고(이 점은 모든 과거의 문헌을 인용할 때 적용되었다), 단락 구분을 준수하지 않고 단락을 합치기도 했으며, 또 과거의 철자법이나 띄어쓰기가 현재의 용례와 다른 경우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했음을 밝혀 둔다. 또한 박정희의 연설문이나 저작에서 일정한 구절을 강조할 때에는 ‘〈 〉’ 괄호를 사용하는데, 필자는 이 부분을 ‘진하게’ 바꾸어 표기했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을 인용할 때에는 편역상 〈대통령비서실〉에서 발간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의 ‘권(또는 ‘집’)’의 번호와 쪽수를 괄호 속에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설문 일자를 병기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필자가 참고한 『연설문집』은 제1-6권 그리고 제16집(추도판, 1979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우위에 있는 이러한 사고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정치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상정하는 (이른바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서구의 자유주의적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따라서 다분히 국가주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또한 국가의 “당면 과제”는 물론 “원대한 국가 목표”를 민주적인 합의에 입각해서 설정하는 것이 정치, 곧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데, 박정희에게 “당면 과제”와 “원대한 국가 목표”는 위기를 수반하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부과하는 무언가 ‘긴급하고 자명한 것’으로 상정되고, 정치는 이러한 과제와 목표를 실현해 나가도록 뒷받침해 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정치의 과제라 할 수 있지만, 당면 과제와 원대한 목표의 설정 역시 (민주적) 정치 본연의 과제이다. 그러나 긴급한 위기에 직면하여 그러한 과제와 목표 설정이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될 때, 그 정치는 ‘행정’의 차원을 강하게 지향하게 되고, 과제와 목표 설정은 민주적인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의 결단과 예지의 산물로 귀결되며, 그 결과 유신시절 박정희의 통치가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정치는 초월적 영도자에 의한 행정적 독재의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11)</sup>

이 발언에 뒤이어 박정희는 “총력안보, 국력배양만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번영을 다져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만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6: 305)”라고 언명하면서 국정의 목표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가와 민족의 수호’, ‘평화와 번영’ 및 ‘평화통일’ 등 국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오직 자신의 판단과 해석에 입각한 ‘총력안보’와 ‘국력배양’만이 그 유일한 실현수단임을 지적한 것이었다.

9) 서구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에 대한 견해는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또는 권력현상설)로 대별되는데, 이 점에서 박정희의 정치관은 물론 국가현상설에 접근한다. 양자의 구분에 대한 소개와 논의로는 이극찬(2007, 104-109)을 참조할 것.

10) 박정희 사상의 국가주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인권(2006, 257-260)을 참조할 것.

11) 박정희 역시 사석에서 “나는 행정가이지 정치가가 아니야”라며 스스로를 ‘정치가’라 기보하는 ‘행정가’로 자처하는 발언을 하곤 했다(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325, 333도 참조). 박정희의 정치협오증은 주로 구정치인에 대한 혐오로 나타났다(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325-328).

그러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실행수단으로서의 총력안보와 국력배양은 곧 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특히 총력안보와 국력배양을 추진하면서 생산성을 강조할 경우, 여야의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을 통해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민주정치, 특히 정당과 의회 및 선거 정치는 고비용과 저효율의 낭비 또는 사치로 치부되게 된다(강정인 2011). 이 점에서 박정희의 정치관이 서구적인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박정희의 이러한 정치관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박정희의 정치사상의 보수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그가 남긴 연설문과 저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I. 박정희의 보수주의: ‘근대화 보수주의’

필자는 다른 글에서 민주화 이전 한국정치질서의 이념적 특징을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정치질서의 중첩적 병존(overlapping coexistence of dual political order)’으로 파악한 바 있다(강정인 2009, 43-45). 그리고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민주화 이전 한국의 보수주의를 “집권 우익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국가안보(반공)와 경제발전(또는 근대화)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제시한 이념”으로 정의했다(강정인 2009, 49: 인용문 다소 수정).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 규정에 기초해 박정희의 보수주의를 국가안보(반공)와 경제발전에 대한 옹호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어서 비서구사회에서 후발적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급진적인 개혁을 수행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박정희식 보수주의의 특징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빚어낸 ‘근대화 보수주의’라는 개념으로 고찰하겠다.

## 1. 반공과 국가안보

박정희는 자신의 권위주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공과 국가안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집중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북한이고,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적지 않게 무력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주 대상으로 한 반공·반북주의로 응축되었다.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세력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결행한 직후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 속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정당화한 바 있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공약의 제1조에서 무엇보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선언했다(김삼웅 1997, 256). 나아가 1961년 7월 박정희는 자신이 최초로 행한 공식적인 연설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취임사>’에서도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1961/07/03, 1: 4).

특히 유신체제 선포의 전주곡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때에도 박정희는 안보위기의 관점에서 이를 정당화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의 안보 이사국이 된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추가 감군 논의, 북한의 전시동원체제 등 대내외적인 안보상황을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1971/12/06, 4: 90).<sup>12)</sup> 물론 안보위기론은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 자체보다는 그것이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부추긴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보수주의는 ‘위기의 정치철학’으로서 대내적인 혁명이나 대외적인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기존 질서를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남한이나 서구의 근현

12) 이와 거의 동일한 발언을 다음 해인 1972년 1월 1일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반복했다(4: 133).



대 보수주의는 비슷한 위기의식을 공유하지만, 남한의 보수주의는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유달리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sup>13)</sup>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자유진영’의 보수주의자들 역시 공산주의의 세계적 팽창을 강조하고 반공을 내세웠지만, 남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분단과 6·25전쟁, 무장공비의 침투 등을 통해 수시로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무엇보다 절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에게 북한은 “반민족적인 이질사상과 공산독재체제를 …… 강요할 목적으로 일[찍이]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전쟁 도발의 기회를 엿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광분하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다(개천절 <경축사>, 1976/10/03, 6: 88).

북한의 위협이 상존했기 때문에 박정희의 보수주의가 반공과 국가안보를 강조한 것은 나름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현대 서구의 보수주의가 공산주의가 신봉하는 “진보”, “인간본성과 사회의 궁극적인 완성 가능성” 및 국가개입에 의한 경제적 “계획” 등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철학과 정책지향의 측면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했고, 또 국가안보를 중시한다고 해도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체제경쟁과 국방력 강화를 지지하는 등 대외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데 반해(볼·대거 2006, 208-212),<sup>14)</sup> 한국의 보수주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도 반공과 국가안보를 수시로 동원했다.<sup>15)</sup>

모든 보수주의가 그런 것처럼 박정희의 보수주의 역시 ‘법과 질서의 유지’를 통한 국내 질서의 안정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 이는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의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시민적 질서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생치안’의 의미를 가졌다.<sup>16)</sup> 그러나 박정희의 경우에는 권위

13) 물론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및 미국의 보수주의는 강대국의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안보공포증에 걸려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4) 뒤에 논할 것처럼, 박정희식의 ‘근대화 보수주의’는 ‘진보’와 경제적 ‘계획’의 유용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서구의 현대 보수주의와 판이했다고 할 수 있다.

15) 미국의 경우에도 매카시즘과 같은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6) 이러한 서술이 서구 보수주의의 ‘질서’에 대한 강조가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강하게 띠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시국치안’의 성격이 더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일상적 치안의 문제 역시 빈번히 국가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졌다.<sup>17)</sup>

이러한 지적은 박정희가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매년 연두기자회견을 한 후 다른 어떤 행사보다 먼저 ‘전국 치안 및 예비군관계관 중앙회의’<sup>18)</sup>를 챙겼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유시>에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학생 데모 등으로 정치 불안이 조성되면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함으로써 국가안보가 단순히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유지(국내의 정치적 안정)와도 직결됨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 점에서 이 회의는 연초에 국가안보는 물론 시국치안을 강조하고 점검하는 연례행사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유신이 절정에 이른 1976년 1월 21일 행한 중앙회의 <유시>에서는 모든 불안과 혼란은 물론 심지어 ‘퇴폐적인 풍조’마저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룰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안, 또는 사회적인 혼란, 국론의 분열, 사회 기강의 해이, 퇴폐적인 풍조, 기타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부조리 등등이 우리의 허점인 것입니다. ……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추방하고 깨끗이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적인 견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나는 이런 문제들을 국가 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6: 34).<sup>19)</sup>

17) 1970년 12월 말경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한 이후락은 취임식에서 “중앙정보부는 국가 안보의 보루다. 국가 안보는 대통령의 안보다. 대통령을 보위하는 것은 바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대통령을 보위하는 전위대다”라고 선언했다고 한다(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28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우리는 대내적으로 박정희의 권위주의체제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국치안이 국가안보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소이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안보=정권안보=박정희 개인안보.’

18) 1970년부터 1972년까지는 ‘치안 및 예비군관계관 중앙회의’였으나 1973년 이후 ‘전국 치안 및 예비군관계관 중앙회의’로 개칭되었다. 1968년 북한은 무장공비를 두 차례 남한에 침투시켰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해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고, 이 연장선상에서 1970년부터 이 회의를 연초에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19) 1975년 4월 29일 행한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박정희는 월남과 크메르가 공산화된 이유로,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국민의 총화단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처럼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등 이른바 ‘퇴폐적인 풍조’의 단속도 국가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곧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일상적인 자유마저 심각하게 제약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sup>20)</sup>

더욱이 반공으로 무장한 국가안보사상은 군인의 집권으로 파급된 군사문화의 일상화로 인해 권위주의와 강고하게 결합되었다. 1968년 1월 청와대 부근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고, 1969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관을 확립하고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교련수업을 실시하였으며, 1975년에는 각급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도호국단을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정계와 경제계—중앙정보부와 공화당 조직 및 정부 내각에 침투한 군사문화,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경제개발계획 및 수출증대 등—를 중심으로 시작된 군사문화가 점차 일반사회와 학교로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의 병영사회화가 진행되었다.<sup>21)</sup>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총화체제”로 규정된 유신체제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신년사〉, 1974/01/01, 5: 193-195). 박정희는 군대와 경찰, 향토예비군과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등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된]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를 당부하고 이를 “**총력안보의 생활화**”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를 방불케 하는 ‘안보의 일상화’를 정착시켰다(전국 치안 및 예비군관계관 중앙회의 〈유시〉, 1976/01/21, 6: 35).

---

데서 비롯한 “정치불안과 혼란”을 들었다(5: 425).

- 20) 박정희에게 장발은 ‘외래 퇴폐풍조’의 상징이었다. 박정희의 장발혐오와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및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강준만(2002b, 110-116)을 참조할 것.
- 21) 김정훈·조희연은 남한사회를 전체적으로 “반공규율사회”로 규정하는 한편, 박정희 정권이 “시민사회를 군대식으로 재편하고 군사문화를 강요”하면서 “군사회·병영화”한 데 주목하여 박정희 정권기를 “반공병영사회”로 특징지은 바 있다(김정훈·조희연 2003, 130).

## 2. 경제발전

박정희의 보수주의에서 경제발전은 자립경제와 경제적 풍요(복지사회)의 달성은 물론 자주국방과 민주역량의 배양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서 다양하면서도 긴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박정희는 민주당 정권이 내세웠던 경제제일주의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경제 우선주의”를 주창했는데(박정희 1963, 255), 제3공화국에서는 경제제일주의를 더욱 압축하여 “수출제일주의”라는 말을 애용했다(예컨대, 제3회 「수출의 날」〈치사〉, 1966/11/30, 2: 855; 제15회 「수출의 날」〈치사〉, 1978/11/30, 6: 371 등).<sup>22)</sup> 유신체제 이후에는 “국가안보 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예를 들어 〈연두기자회견〉, 1976/01/15, 6: 8; 197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976/10/04, 6: 94 등), 수출제일주의와 안보제일주의는 상호 대체관계라기보다는 병용관계였다.

사실 경제발전이야말로 다른 어느 것보다 박정희 체제를 지탱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집권기에 연일 신문의 1면 또는 경제면을 장식하던 수출신장 및 경제성장을 위주로 한 눈부신 경제실적 보도는 오늘날의 프로스포츠 기사 못지않게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연두교서, 연두기자회견, 일방적인 기자회견,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수출의 날과 각종 기공식·준공식 등에 행한 연설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박정희는 자신의 성적을 부모 앞에서 자랑하는 초등학생마냥 항상 구체적인 수치와 업적을 장황하게 나열하여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앞으로 달성할 경제발전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지를 극대화하고자 했다.<sup>23)</sup> 이러한 “발전주의”야말로

22) 박정희는 1963년을 ‘수출의 해’로 지정하고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면서 수출에 공이 큰 기업인들을 표창하기 시작했다. 강준만은 박정희 정권에서 ‘수출제일주의’는 “일종의 신앙”이었으며(강준만 2004a, 277), 박정희는 “강력하고 유능한 수출 총사령관”이었다고 평가한다(강준만 2004b, 13).

23) 앞의 주에서 언급한 강준만의 비유를 따른다면, 우리는 이를 수출 총사령관이 수출전사 또는 수출역군이기도 한 국민 앞에서 혁혁한 전과를 알리고 향후 전쟁계획을 브리핑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창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이념적 자원이었다.<sup>24)</sup>

경제발전의 목적은 〈5·16 혁명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무엇보다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 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또한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 이라는 측면에서 반공·승공 통일과 맞닿아 있었다(김삼웅 1997, 256). 박정희에게 경제발전은 사실상 최우선과제였으며, 군정기인 1962년 1월 1일 ‘국민에게 보내는 〈연두사〉’ 에서도 “당면한 우리의 지상목표는 경제재건을 위한 산업개발” 이라고 강조했다(1: 157). 그리고 같은 해 ‘울산공업지구 설정 및 기공식 〈치사〉’ 에서는 “5·16 혁명의 진의는 …… 오로지 이 겨레로부터 빈곤을 구축하고, 자손만대를 위한 영원한 민족적 번영과 복지를 마련할 경제재건을 성취해야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에서 쫓기했던 것” 이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정당화했다(1962/02/03, 1: 177-178). 빈곤에 시달리던 당시 한국 민중에게 ‘잘 살아보세’ 를 외치며 매진하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제일주의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군사쿠데타에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온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다.<sup>25)</sup>

또한 박정희는 군정 당시 펴낸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빈곤이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박정희 1962, 35; 32, 223도 참조) 반공, 곧 공산주의 침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66년에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자립경제건설과 조국근대화” 작업은 공산침략에 대한 무력투쟁 못지않게 “승공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 이라고 강조했다(「자유의 날」 제12주년 기념일 〈담화문〉, 1966/01/23, 2: 596-597). 그러나 박정희는 “국토통일은 자립과 근대화의 중간 목표가 달성된 연

24) 일찍이 최장집·이성형은 박정희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서술하면서 “반공주의와 권위주의는 발전주의와 접목됨으로써 비로소 소극적·방어적 내용으로부터 적극적·공격적인 내용을 갖게 되었다” 고 지적한 바 있다(최장집·이성형 1991, 218-219).

25) 제3공화국은 물론 유신시기에 이르기까지 박정희의 연설에는 “잘 살아보자”, “잘 살아야 하겠다”, “잘 살아 보겠다” 는 구절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했다. 홍석률은 1960년대 초 안병욱과 차기벽의 글을 분석하면서 당시 지식인들 대다수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를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홍석률 1999, 243-244).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선건설 후통일론’을 내세웠고(1966년 6·25 제16주년 <담화문>, 2: 712), 이 점에서 경제개발 담론은 사실상 통일논의를 유예시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었다.

### 3. 근대화 보수주의<sup>26)</sup>

19세기 초 유럽의 보수주의는 산업혁명과 자유주의적 프랑스 혁명, 곧 ‘근대화’에 반대하는 것을 1차적 사명으로 삼으면서 봉건적 농업사회 및 귀족적 질서를 옹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1848년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본격적 대두 및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발발과 함께, 보수주의는 종래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수정 자본주의적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면서 개인적 자유와 제한적 정부를 옹호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결국 근대화의 결과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에 수렴하는 현대 보수주의로 변모하게 되었다(강정인 2009, 40-43). 반면 해방 후 집권한 남한의 보수세력은 세계사적 시간대가 일국사적 시간대를 압도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의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화를 추진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삼았다(강정인 2009, 43-45). 이 점에서 근대화와 관련하여 한말 위정척사파가 19세기 초 서구 보수주의와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면, 해방 후 남한의 보수세력은 제한적이거나 서구의 현대 보수주의와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신생국가의 보수세력이 근대화를 위로부터 추진하면서 채택한 ‘근대화 보수주의’는 ‘서구 따라잡기’의 일환으로서 민족의 절대적인 생존전략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화 보수주의’는 서구 근대사상사의 맥락에서는 형용모순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비서구 신생독립국가에게는 역사적 당위이자 (우

26) 필자는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적 빈곤 원인을 탐색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근대화 보수주의’라는 특징을 지적한 바 있다(강정인 2009, 46-49). 이 글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부연했다.

파) 민족주의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현대 보수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광범위한 경제 개입에 반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근대화 보수주의는 국가주도에 의한 위로부터의 경제개발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국가의 광범위한 시장 개입을 당연시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제약을 주도하고 용인했다.<sup>27)</sup> 반공과 국가안보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적 통치가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자유를 억압했다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 일반 서민의 경제적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했다.<sup>28)</sup>

또한 서구의 보수주의—특히 버크(Edmund Burke)에 의해 대표되는 영국 보수주의—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연綿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종교·역사·권위 등에 비추어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현존 질서의 유지를 강조한 데 반해, 박정희의 근대화 보수주의는 (과거의 역사적 과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현재의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급진적인 사회 변화(=근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근대화 보수주의는 ‘조국 근대화’라는 현재의 급진적 개혁을 통해 고도 산업화, 풍요한 복지사회의 실현 등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19세기 서구의 진보사상과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미래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이상화된 과거의 영광을 상상하고 상기시키는 수사

27) 후일 이는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발전국가론’으로 이론화되었다.

28) 이와 달리 김동춘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기업활동의 ‘자유’는 금과옥조의 논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김동춘 1996, 288). 그러나 김동춘의 이러한 주장은 과장된 감이 있다. 당시 정부의 각종 물가단속, 이자율 통제, 대기업에 대한 특혜지원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껏해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에게, 그것도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당시 정부의 각종 인허가 정책 및 다양한 경제 통제를 고려할 때, 기업 활동의 자유는 오늘날처럼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의 사유재산권도 적절히 보장받지 못했다. 각종 개발을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헐값 보상, 그린벨트 지정, 부실기업들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긴급명령으로 기업에 대한 사채를 동결시킨 1972년의 이른바 8·3 조치와 그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감수해야 했던 소액 채권자들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8·3조치에 대해서는 강준만 2002a, 217-220 참조).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뉴라이트 역시 박정희 정권기의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반대하면서 ‘큰 시장 작은 국가’를 주장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김일영 2006, 393-396).

적 구절들— 예를 들어 “민족중흥”이라는 용어, “단군 성조”, “고구려의 용맹과 기개”, 신라의 “화랑정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등의 찬양—로 표현됨으로써 복고적 비전을 투영하기도 했다. 곧 근대화 보수주의는 진보적 전망과 복고적 비전을 한데 아우르고 있었다.<sup>29)</sup>

이처럼 근대화 보수주의가 지니고 있는 ‘진보적’ 성격으로 인해 박정희의 연설에서는 전형적인 진보주의자의 논리와 수사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1967년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졸업생들에게 “승리는 미래에 사는 편에 있고, 희망과 용기로써 전진하는 편에 있는 것이며, 퇴폐적인 과거의 잔재를 저버리는 대가로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1967/02/27, 2: 959).<sup>30)</sup> 또한 박정희는 1969년의 한 연설에서 당대의 상황을 “온갖 전통적인 것, 수구적인 것, 낡은 것이 급속하게 근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변화의 과정”으로 규정했다(한국기자협회 창립 제5주년 기념식 <메시지>, 1969/08/18, 3: 540). 이처럼 박정희에게 현재라는 시점은 서구의 보수주의에서처럼 자랑스러운 전통과 종교, 역사 및 권위를 보존하고 확충하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과거가 도달한 가장 최근의 지점”이 아니라, 진보주의에서처럼 장차 도달할 영광스러운 목표를 차질 없이 성취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미래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니스벳 1997, 100; 원문의 표현을 다소 변형한 것). 급기야 197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정희는 민족통일을 경유해 도달한 민족중흥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민족주의와 결합한 근대화 보수주의는 그 절정에 도달했다.

서기 2천 년경의 …… 우리 조국은, — 국토 통일을 이룩한 지 이미 오래된 강력한 민족 국가로서, —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요한 선진 복지 국가로서, —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

29) 이는 굳이 스미스(Anthony Smith)나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저작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추구한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30) 비슷한 구절로 ‘제12회 전국 토지개발조합장 대회 및 미곡중산경려회 포상식 <치사>(1967/03/30, 2: 982-983)’를 참조할 것.



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1970/08/15, 3: 811).<sup>31)</sup>

대신 이처럼 영광된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을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써 박정희는 기존 정치질서의 보수를 주장했다. 그는 1967년 7월 1일 행한 ‘제 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는 민족사상 참으로 획기적인 역사적 과업에 이미 착수” 했다고 선언하면서 “**균형 있는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에 빛나는 공업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위대한 전진”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는 한편, “정국의 안정은 경제발전의 대전제”라고 역설했다(3: 4). 따라서 박정희에게 “사회적 불안과 혼돈”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근대화 작업”을 “필연적으로 공전” 시키고 “지연” 시키는 위협을 상징했다(국방대학원 제12기 졸업식 <치사>, 1967/07/10, 3: 10).

또한 민주화를 위해 반정부운동을 전개하는 학생들의 ‘급진성’을 비판할 때, 박정희는 보수주의자의 전형적인 논리에 따라 그들의 개혁 요구를 거부했다.

…… 학생들의 눈으로 본다면 현실사회나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부조리 투성이고 …… 데모라도 실컷 해서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겠지만] …… 사회라는 것은 그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학생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연두기자회견>, 1974/01/18, 5: 240).

이어서 그는 농민들을 위한 쌀값인상이 노동자의 노임 인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공산품의 물가양등이 초래됨으로써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예를 들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5: 240-241). 이러한 입장은 기존 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혁에 반대하기 위해 ‘생태학적 사회관’을 피력한 영국 보수주의자 버크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sup>32)</sup> 그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이나 변화를 단기간

31)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암살되기 두 달 전 행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16: 147).

32) 이 구절과 관련하여 이 논문의 한 심사자는 ‘생태학적 세계관’ 대신 ‘유기체적 사회

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하고 생태학적인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 이는 대개 그러한 시도로 인한 변화의 폭이 애초에 의도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곧 급격한 변혁의 결과 나중에 발생하는 유해한 부작용이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이익을 넘어설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강정인 2007, 482-483).<sup>33)</sup>

## IV. 박정희의 반자유주의

### 1. 냉전자유주의와 민족의 자유

19세기 후반 근대 서구문명의 본격적인 동북아시아 공략과 함께 외생적으로 비서구관 근대화의 계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서구적 근대화'의 과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강인한 유교적 전통은 물론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식민지의 경험 및 일제가 부과한 파시즘과 국가주의적 교육, 해방 후 겪은 민족분단과 동족 간의 참혹한 6·25전쟁 등 민족과 국가

---

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자의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필자는 '생태학적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고자 한다. 물론 상대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유기체적 사회관에서는 구성요소가 전체로부터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데 반해, 생태학적 세계관에서는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생물이 독립적인 생명체로서 나름의 자율성을 갖는다. 박정희는 인용된 구절에서 자율적인 개별 행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초래되는 전체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해악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유기체적 세계관보다 생태학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33)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보수의 수사학을 분류하면서, 무용론, 위태론, 왜곡론을 제시했는데, 박정희의 이러한 논리는 위태론에 접근한다(Hirschman 1991). 물론 근대화를 돌진적으로 추진한 박정희가 생태학적 사회관을 충실히 신봉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부 학생들의 급진적인 요구를 거부할 때 생태학적 사회관에 입각한 보수주의적 수사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가 당면했던 존망의 경험과 위기는 국가나 사회 또는 민족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서구적 자유주의의 온전한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sup>34)</sup> 정치가로서 박정희 역시 이 모든 경험으로 인해 자유주의 이념을 온전히 내면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민족과 국가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사고를 체화해야 했던 군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추가적인 요인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 헌법에 명기된 민주주의는 물론 서구의 개인적 자유주의 역시 박정희와는 거리가 먼 사상이었다. 그 결과 자유주의에 대한 박정희 사상의 주된 특징은 공산주의를 주된 적으로 설정하는 냉전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보다 민족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족적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폄훼로 요약된다.

박정희는 196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방은 “민족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인들의 경우 “해방이 그대로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안정” 이야말로 “우리들의 지상 과제요 …… 지상 명령”으로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해방의 의미”는 물론 “자유”의 가치도, 평화의 희망도,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린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산 침략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해방과 분단 이후 자유의 주적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임을 분명히 했다(1969/08/15, 3: 537, 539).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 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자유를 부인하는 것을 기본 교조로 하고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제6차 아시아기독교 반공대회 〈치사〉, 1970/09/30, 3: 832). 또한 그는 1970년 ‘세계반공연맹 제4차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 애호 인민들의 철석같은

34) 김동춘에 따르면 현대 한국 정치사상사에서 자유주의의 빈곤과 민족주의의 압도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김동춘 1996, 298, 302). 그러나 자유주의의 빈곤이 민족주의의 강화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민족주의의 선제적 강화가 자유주의의 빈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깊이 연구해 볼 만한 주제다. 전체적으로 김동춘(1996)은 전자의 입장에, 필자는 박명림·신기욱과 더불어 후자의 입장에 가깝다(박명림 1996; 신기욱 2009).

단결과 우의” 및 “총동원”을 주문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의 주적이 공산주의임을 분명히 했던 바, 이는 박정희식의 ‘자유주의’가 냉전 자유주의임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1970/09/16, 3: 824).

자유와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공산주의를 주적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탄압해 온 박정희와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냉전자유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김동춘 1996, 285-286 등).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정치 윤리적 비난을 제쳐 놓고 현대 한국정치의 이념적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부분적으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초래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 정치사상사를 일별할 때, 고전적 자유주의가 탄생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유주의가 자유를 위해 투쟁해 온 주된 대상은 유럽의 전근대적 질서가 부과한 종교적 순응, 귀속적 신분 및 정치적 절대주의(전제군주정)였다(볼·대거 2006, 96, 119). 그러나 해방 당시 한국은, 한말의 개혁 및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뒤이은 패망과정에서 종교적 순응(유교의 전일적 군림), 귀속적 신분(반상제도), 전제군주정(이하 ‘자유’의 3대 주적)이 사실상 타파되고, 일본 제국주의라는 또 다른 정치적 절대주의 역시 붕괴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직후 제기된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체제 정립을 포함한) 공산혁명의 위협과 냉전체제의 전개에 의해 한국의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정치적 절대주의에 해당하는,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자유의 주된 위협으로 설정한 것은, 그들의 신조와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방 후 한국 자유주의에 부과된 과제는 ‘자유’의 3대 주적과의 투쟁이 아니라 공산주의와의 투쟁이었던 것이다.<sup>35)</sup> 다만 남한 집권세력의 자유주의

35)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윌린(Sheldon Wolin)이 18~19세기 서구 근대 정치사상사에 흔재되어 있던 민주적 급진주의의 전통과 자유주의의 전통을 구별하고, 자유주의를 통상적인 이해와 달리 혁명적 열기로 무장한 전복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중산계급 특유의 ‘소심함(timidity)’과 ‘신중함(prudence)’을 반영한 ‘차분함의 철학(philosophy of sobriety)’으로, 곧 두려움에서 태어나고, 환멸에 의해 숙성되며, 인간의 조건이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 성향을 내면화한 철학으로 해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윌린 2009, 152-250). 이러한 해석은 한민당을 비롯한 남한 보수세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법한데, 박정희는 한민당을 위주로 한 제1~2공

는 18~19세기 '3대 주적'의 타파에 앞장섬으로써 스스로 혁명적 열기를 축적했던 서구 자유주의의 진보적 동력이 거세된 채, 임박한 공산혁명의 위협에 따라 조속하게 반동적인 이데올로기로 타락하여 반공을 앞세우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자가당착에 봉착했다. 그들의 반공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곧 자유주의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반대의 자유를 탄압하고자 한 '반공을 위한 반공'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위한 반공'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유에 대한 박정희 사고의 또 다른 특징은, 빈번히 "민족의 자유"를 언급하는 박정희의 연설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자유를 향유하는 우선적 주체가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이라는 점이다.<sup>36)</sup> 그가 자주 사용하는 자유 '인민', 자유 '아시아', '세계' 자유민, 자유 '우방' 등의 용어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박정희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그가 소속된 집단이 (외부로부터 독립된) 집단적 자유(=자주독립)를 누릴 때, 비로소 자신의 사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7)</sup>

사상사적으로 볼 때 자유의 향유자로 민족이나 국가 등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박정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세기 말을 풍미한 민족주의, 인종주의, 사회적 다윈주의, 사회적 유기체론, 제국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은 민족과 인종 사이의 집단적인 생존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 대신 국가·민족·인종 등 집단을 정치적 투쟁의 기본단위로 설정했으며, 자유 역시 집단적 차원에서 개념화했다(전복희 1996; 신기욱 2009; 슈미드 2009). 또한 이 점은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단계에서도 발견되는데, 비록 절대주의 왕권을 옹호했지만 이를 원자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사회계약론의 논리구조를 통해 정당화함으로써 본

---

화국의 대다수 보수세력과 달리 저항적 측면이 강한 일종의 '민족적 자유주의'를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신봉함으로써 그러한 성향에서 비껴서 있었다.

- 36) 박정희는 민족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국내적 사정과 국제적 상황을 제시하는데, 전자는 "국내의 경제사정 즉 빈곤, 기아, 실업" 등을, 후자는 '북괴'를 앞세운 "공산 제국주의의 침략"을 지시했다(박정희 1962, 41).
- 37) 그러나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출간한 저작에서 이러한 자신의 논리가 한국과 같이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박정희 1962, 40).

의 아니게 자유주의의 맹아를 뿌린 홉스의 『리바이어던』도 그 한 예이다. 홉스는 자유(liberty)를 “사사로운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코먼웰스의 자유” 또는 “공공(公共)의 권리”로 개념화하면서 ‘국가’나 ‘코먼웰스(commonwealth)’는 그것을 “대표하는 개인 또는 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자유를 누린다고 주장했다(홉스 2008, 286-287). 여기서 홉스가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가치를 부여한 자유는 지배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사적인 자유라기보다는 독립된 공동체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누리는 자유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sup>38)</sup> 이 점에서 홉스가 긍정적인 ‘코먼웰스’의 자유는 박정희가 역설하는 ‘민족의 자유’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sup>39)</sup>

38)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루카 시의 성탑에는 자유(LIBERTAS)라는 말이 큰 글씨로 씌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루카의 시민 개개인이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보다 더 많은 자유를 지니고 있다든가, 코먼웰스에 대한 봉사를 면제받고 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군주정이건 민주정이건 코먼웰스의 자유는 동일한 것이다”(홉스 2008, 286-287).

39) 계속 논할 것처럼 박정희에게 자유의 개념은 민족과 국가의 속성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데, 이에 대해 전인권은 박정희가 “자신의 국가주의적 사상을 ‘민족 자유’란 정체불명의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아무런 경계 없이 주장한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전인권 2006, 258). 그러나 박정희의 ‘민족 자유’ 또는 ‘민족의 자유’ 개념을 국가주의적 사상의 반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합당하더라도, 이를 “정체불명의 신조어”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대 초까지 서양에서도 자유는 집단적 주체(도시나 국가 등 정치공동체)가 향유하는 ‘자유’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홉스뿐 아니라 마키아벨리 역시 자신의 공화주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어떤 도시가 자유롭다는 것을 그 도시가 공동체 자체의 권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권위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도시(국가)는 전제군주의 지배에 의해 내적으로 부과된 것이든 아니면 제국주의세력에 의해 외적으로 부과된 것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정치적 연속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유는 대외적 독립성과 시민의 공화주의적 가치(self-government)를 지시하는 것이었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다. ‘사적인 자유’는 영국에서 자유주의의 발전 및 프랑스 혁명과 함께 비로소 자유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으로 부상한 근대의 산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프랑스 혁명기 콩스탄(Benjamin Constant)이 “근대인의 자유와 비교된 고대인의 자유(1819)”라는 연설에서 “공적 업무에서 주권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것이 고대인의 자유의 특징이며, 그에 대비되는 근대인은 사적 삶에서의 독립된 개인이라고 구별했다”는 점,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삶에서 개인의 자유가 ‘진정한 근대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콩스탄에 대한 논

또한 민족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구분하는 연장선상에서 박정희는 다시 ‘큰 자유’와 ‘작은 자유’를 나누었다. 그는 1974년 「국군의 날」〈유시〉에서 유신체제를 “공산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로 규정하면서,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974/10/1, 5: 312). 때문에 민족이나 국가의 ‘큰 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소집단의 ‘작은 자유’는 불온시되었다. 그는 일찍이 1962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행한 〈기념사〉에서도 사적인 자유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인간에 있어 생명 이상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자유를 편협된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만 욕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민족의 이익과 사회공공의 복지 향상에 부합되도록 조절하고 행사하여야 하며, 그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1962/12/10, 1: 338).

이 점에서 박정희에게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자유, 곧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근대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였다.

국가의 안보와 민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큰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박정희에게 자유란 자연법상의 권리라기보다는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체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법실증주의적 개념이었다.<sup>40)</sup>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사회를 혼란시켜 가면서까지 회복하여야 할 자유나 민주가 따로 더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

의와 인용에 대해서는 홍태영(2008, 97)을 참조할 것. 따라서 박정희가 개인의 사적인 자유나 공화주의적 가치(자유) — 곧 오늘날의 민주공화주의 — 를 억압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가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대외적 자유, 자주독립을 추구한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정희에게 민족의 자유는 주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40) 이러한 자유 개념은 홉스가 언급한 신민의 자유와 일치한다. 홉스에게 “백성의 자유”는 주권자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이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시사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홉스 2008, 282-283).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주장했다.<sup>41)</sup> 그리고 이러한 사정으로 “역사적인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을 예시했다(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 1975/01/22, 5: 400-401; 〈연두기자회견〉, 1975/01/14, 5: 377). 궁극적으로 박정희는 “국가 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족의 생존권의 보장 없는 자유도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sup>42)</sup> 때문에 이기주의 역시 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민족을 도외시하는 이기주의”로 개념화되었던 것이다(전국 치안 및 예비군관계관 중앙회의 〈유시〉, 1975/01/21, 5: 396; 〈연두기자회견〉, 1976/01/15, 6: 29).<sup>43)</sup> 요컨대 박정희는 추상적인 개인 차원에서의 자유, 곧 서구식 자유주의에 대해 적대적이었다.<sup>44)</sup>

## 2. 박정희의 인권담론

박정희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언필칭 자유

41) 유신헌법은 대부분의 개별 기본권 조항에 법률유보를 붙이고, 나아가 기본권제한의 일 반규정에서 제3공화국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유신헌법 제32조 제2항),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자연법적인 것에서 법실증 주의적인 것으로 전환했다(김영수 2001, 562-563).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잠정적 정지”를 가능케 하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명문화함으로써(유신헌법 53조), 유신시 기의 정치사가 보여준 것처럼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켰다.

42) 박정희는 유신체제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구사하면서 비판했다(〈연두기자회견〉, 1979/01/19, 16: 48).

43) 개인의 자유가 “국가민족의 이익과 사회공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이를 도외시하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박정희의 자유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이 불문에 부친 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허용하는 흡스의 자유 개념과 결별한다.

44)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인 1960년 4월 이승만 하야 직후 어느 사석에서, 일본의 전후 부흥이 자유주의자들 덕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유주의? 자유주의 갖고 뭐가 돼. 국수주의자들의 기백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거야. 우리는 그 기백을 배워야 하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조갑제 1998, 187).



니, 민주니 외치면서, 그 실은 자유와 민주가 자라날 수 있는 있는 바탕이 되는 국력배양과 법질서를 파괴하려 들고 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국민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행위만을 자행하”는 자들이라고 규탄했다(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안보보고회 <치사>, 1974/12/16, 5: 349). 이러한 사고에 따르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정치적 반대자들은 북한 공산주의자와 연결된 세력으로서 남한체제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사범’으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이 아니었다.<sup>45)</sup> 1976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민주애국인사를 석방하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그는 이렇게 힐난했다.

…… 민주애국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또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들을 민주애국인사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국가에 반역을 한 큰 국사범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인 간첩, 공산주의에 협력한 자들을 어떻게 …… 석방할 수가 있습니까(6: 23-24).

1975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하여 고문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사건은 “그 주모자들[이] 폭력으로써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음모를 했기 때문에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고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답은 회피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헌법과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천부의 절대 신성불가침으로서, 헌법이나 법을 가지고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비판세력에 대해 “그것은 잘못이다, …… 우리나라 법에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대꾸했다(5: 379).<sup>46)</sup>

45) 물론 만민평등의 인권사상에 의하면 국사범 역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6) 곧 서술하겠지만 박정희는 1970년 이전에 행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기념사>나 <치사>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인권을 천부불가양의 권리라고 빈번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명문화한 헌정체제에서 박정희가 개인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인권의 보장을 무작정 비켜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는 때가 바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이었다. 이 때문인지 박정희는 권력을 장악한 후 1962년부터 1970년까지 줄곧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기념사〉나 〈치사〉를 발표했다.<sup>47)</sup>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행한 박정희의 〈치사〉는 대체로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먼저 그는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귀한 존엄성, 자유 및 권리를 존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인류 투쟁의 역사 또는 인권보장의 가치를 거론한다. 그리고 이어서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권과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과 함께, 인권보장을 위한 ‘법에 의한 지배’를 대체로 공직자와 국민의 준법의무로 이해하여 이를 강조한다.<sup>48)</sup> 그러나 남한 정부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며, 대신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의 위협을 역설한다. 동시에 공산주의 일반은 물론 북한 공산체제에서는 인민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남한에서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빈곤에서의 해방, 경제적 번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 및 조국 근대화의 대열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sup>49)</sup> 결국 박정희는 북한과의 대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남한에서

---

언급하곤 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많은 구절들이 그러하듯이, 유신헌법 제정 이후 연설들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그의 해석이 자연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것임을 드러낸다. 주 41)에서 논한 것처럼, 박정희는 유신체제로 이행하면서 긴급조치나 법에 의해 이루어진 기본적 인권에 대한 현저한 제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실증주의적 논변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47) 다만 1964년에는 그 기간 중에 독일을 방문하고 있어 하지 않았다.

48) 원래 근대 헌정주의에서 ‘법에 의한 지배’는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준법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준법의무는 근대의 ‘법에 의한 지배’라는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도 역사적으로 모든 통치자가 강조했던 것이다.

북한보다 인권보장이 충실히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한 통일의 필요성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조국근대화에 진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남한의 인권상황에 불만을 느낄 법한 일반 국민들을 무마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유신체제로 들어선 이후에 박정희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아무런 〈기념사〉나 〈치사〉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시기를 전후하여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유시〉를 발표하곤 했는데, 1975~76년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당일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유신체제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치사를 행하기에는 나름대로 자괴감이 들었거나, 아니면 정부비판세력이나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인권’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강력한 무기로 들이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단어에 비위가 상했을 법도 하다. 아무튼 과거와 달리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공약마저도 회피해 버림으로써,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유신체제가 ‘반자유주의’ 적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V. 글을 맺으며

서론에서 필자는 현대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민주화 이전 한국 정치질서의 특징을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질서의 중첩적 병존’이라는 복합적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과 특징은 박정희의 보수주의에도 관철되고 있는 바, 앞에서 서술한 박정희의 보수주의에 대한 논의를

---

49) 이상의 내용은 박정희가 1967년(3: 97-98), 1968년(3: 385-386), 1969년(3: 643-644)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행한 〈치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중심으로 이를 간략히 살펴보고 정리한 후,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직면했던 고민의 일단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에서 파급된 근대화가 미친 차등적인 효과 등은 모든 사회가 동일한 시간대에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한 사회 내부에도 다양한 시간대가 공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점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며 사유의 일반적인 존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역사적 선점에서 비롯된 세계사적 조건의 변화와 공간의 불균등한 배치는 비동시성의 문제로 하여금 주변부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사유 전반을 강박하게 만든다. 즉,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압축될 수 있는 시간성의 문제가 사상의 전개 양상을 결정짓는 조건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적으로 배열된 목적론적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현재 자신의 시간대에서 목적론적으로 파악된 동시대에 접근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을 강구하는 것, 자신이 취한 입장과 전략을 동시성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정당화하는 것 등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넘어 사상의 전개 양태를 추동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를 그 자체로 정당화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보수하고자 하는 성격' 이야말로 한국 보수주의의 일반, 특히 박정희 보수주의의 중요 요소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박정희 보수주의의 성격은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적 모델로 부과한 세계사적 시간대의 압도와 권위주의 질서를 강행하고자 하는 일국사적 시간대의 반발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의해 강박되고 있는 이념의 전개 공간 속에서 어우러진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핵심인 자유주의와 산업화에 격렬히 반대했던 19세기 유럽의 과거지향적 보수주의와 달리, 박정희의 보수주의가 20세기 후반에 따라잡기식 근대화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산업화를 돌진적으로 추진해야 했던(서구 역사에서는 형용모순에 해당하는) 미래지향적 '근대화 보수주의'라는 사실, 곧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보수적 요소와 진보적 요소가 혼재한다는 사실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초래한 일견 역설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보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한

국정치에서 정치사상이 내재적 발전계기를 거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당대 서구의 최종적인 완성태가 그 성장의 과정을 생략 또는 압축당한 채 외부로부터 수용되어 현대 한국 정치사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해방 후 남한에서 전개된 보수주의는 주변부 후발국을 특징짓는 근대화 보수주의로서, 서구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는 수용하되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 서구의 냉전형 보수주의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세계사적 시간대를 주도하는 현대 서구의 보수주의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의 반자유주의적(=권위주의적)인 정치사상은 이러한 외양 속에 세계사적 시간대에 대한 한국의 일국사적 시간대의 강력한 반발이라는 요소를 응축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반발을 동시성의 제약 속에서 표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서술(또는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의 필자의 고민을 덧붙이자면, 필자는 ‘박정희의 보수주의 정치사상 가운데 어떤 것이 박정희 개인의 독특한 정치사상이고, 어떤 것이 지식인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광범위하게 공유한 것인가’라는 평범한 질문에 부딪혔다. 그의 보수주의 사상을 구성하는 권위주의, 국가안보(반공)와 경제발전, 근대화 보수주의, 개인의 자유보다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초한) 국가와 민족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족적 자유주의’ 등을, 적어도 민주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의 경제발전론은 제2공화국이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경제제일주의’를 수용한 것이고,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의 당위성은 후일 박정희 권위주의체제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다.<sup>50)</sup>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달리 표현될 수 있다. 박정희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50) 물론 경제발전의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내포적 공업화나 외향적 공업화나, 수입대체형 공업화나 수출주도형 공업화나’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에 외향적인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또 1970년대에 들어와 중화학 공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들은 소멸되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홍석률(1999; 2002)과 김보현(2006)을 참조할 것.

서 당대에 국민 일반이 지니고 있던 보수적 정치사상을 대변한 것인가 아니면 장기간에 걸친 그의 통치를 통해 그것을 조형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18년에 걸친 장기간의 집권 기간 동안 박정희의 보수주의적 정치사상이 정권이 충원하여 활용한 정치 엘리트와 일반 공무원—군부, 관료, 학자, 언론인 등—, 정권이 추진한 다방면에 걸친 정책, 정권이 치밀하게 전개한 (대중매체의 장악을 통한) 홍보 및 선전활동 및 대중동원(새마을운동,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등)에 의해 한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박정희 집권기를 단순히 강압에 의한 독재라기보다는 대중의 호응과 동의를 수반한 ‘대중독재’로 개념화하려는 임지현을 비롯한 동료 역사학자들의 이론적 시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박정희의 통치가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려 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대중들이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sup>51)</sup> 이 점에서 반공과 근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의 보수주의가 국민 일반의 보수주의적 태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해석 역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의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는 한편으로 일반 국민 대중의 보수주의를 반영했으며, 동시에 그의 집권 역시 일반 대중의 보수주의를 강력하게 조형했다는 상호작용적 해석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영국 보수주의를 조형한 버크의 보수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된 그의 보수주의는 당시 영국 국왕과 귀족계급은 물론 보수적인 정치인과 시민계층으로부터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영국 보수주의의 원형으로서 후일 영국 보수주의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상호작용적 이유로 필자가 구성한 박정희의 보수주의 사상 역시 박정희 시대의 영향권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하게 또는 진부하게 다가온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박정희의 보수주의는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과 근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의 원형을 구성하며, 그의 시대는 물론 그의 사후에도 현대 한국 보수주의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1) ‘대중독재’ 개념에 대해서는 임지현(2004)을, ‘대중독재’ 개념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박정희 통치의 성격에 대한 논쟁으로는 조희연(2005)을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1. 박정희 저작 및 연설문집

- 대통령비서실.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권』(최고회의편: 1961.07-1963.12). 서울: 대통령비서실.
- \_\_\_\_\_.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권』(제5대편: 1963.12-1967.06). 서울: 대통령비서실.
- \_\_\_\_\_.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권』(제6대편: 1967.07-1971.06). 서울: 대통령비서실.
- \_\_\_\_\_.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4권』(제7대편: 1971.07-1972.12). 서울: 대통령비서실.
- \_\_\_\_\_. 1976.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5권』(제8대편 상: 1972.12-1975.12). 서울: 대통령비서실.
- \_\_\_\_\_. 1979.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6집』(추도판: 1979.01-1979.10). 서울: 대통령비서실.
- \_\_\_\_\_. 1979.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6권』(제8대편 하: 1976.01-1978.12). 서울: 대통령비서실.
- 박정희. 1962. 『우리 민족의 나갈 길』(개정5판).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향문사.

### 2. 2차 문헌

- 강정인. 2007. “보수주의-근대 보수주의의 원조.” 강정인·김용민·황태연 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474-506. 서울: 책세상.
- \_\_\_\_\_. 2008.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자기쇄신?” 『사회과학연구』(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2, 6-40.
- \_\_\_\_\_. 2009. “보수주의.”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지음. 『한국정치 of 이념과 사상』, 35-119.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10. “현대 한국(남한)정치의 이념적 지형: ‘비동시성의 동시성’ 과 ‘민족(주의)

- 의 신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학회 월례발표회. 서울. 5월 15일.
- \_\_\_\_\_. 2011.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행정적'·'민족적'·'한국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논집』(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7, 287-321.
- 강정인·김현아. 2006.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 『사회과학연구』(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2, 6-43.
- 강준만. 2002a.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1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_\_\_\_\_. 2002b.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2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_\_\_\_\_. 2004a.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2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_\_\_\_\_. 2004b.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3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김갑식. 2007. "박정희 시대 연구경향과 재조명." 『한국정치연구』(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6:1, 81-110.
- 김동춘. 1996. "사상의 전개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 모습."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273-309.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서울: 갈무리.
- 김삼웅. 1997.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서울: 가람기획.
- 김영수. 2001. 『한국헌법사』(수정증보). 서울: 학문사.
- 김일영. 2006.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그리고 공통된 지평으로서의 자유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한국정치외교사학회) 27:2, 373-401.
- 김정훈·조희연. 2003.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 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123-199. 서울: 함께 읽는 책.
- 니스벳, R. 1997. "보수주의." R. 니스벳·C. B. 맥퍼슨 지음. 강정인·김상우 옮김.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63-206.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명림. 1996. "근대화 프로젝트와 한국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311-348. 서울: 역사비평사.
- 박현모. 2007. "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 관 변화 연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6:2, 71-93.
- 볼, 테렌스·대거, 리처드 지음. 정승현 외 옮김. 2006.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서울: 아카넷.
- 슈미드, 앙드레 지음. 정여울 옮김. 2009.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서울: 휴머니스트.



- 신기욱 지음. 이진준 옮김.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서울: 창비.
- 윌린, 셸던 지음. 강정인·이지윤 옮김. 2009. 『정치와 비전』(2). 서울: 후마니타스.
- 이광일. 1997. “‘박정희 체제론’ 비판.” 『정치비평』(한국정치연구회) 3, 121-140.
- \_\_\_\_\_. 1998. “박정희정권에 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29, 275-296.
- \_\_\_\_\_. 2003. “성장·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조희연(2003), 201-236.
- 이극찬. 2007. 『정치학』(제6전정판). 서울: 범문사.
- 임지현. 2004. “‘대중독재’의 지형도 그리기.”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1』, 17-55. 서울: 책세상.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 전인권. 2002. “박정희 민주주의관: 연설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1:2, 139-155.
- \_\_\_\_\_. 2006. 『박정희 평전』. 서울: 이학사.
- 전재호. 1997.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조갑제. 1998.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3. 革命 前夜)』. 서울: 조선일보사.
- 조희연. 2003. “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 동학: 한국 현대사 속에서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33-120. 서울: 함께 읽는 책.
- \_\_\_\_\_. 2005. “한국의 대중독재 논쟁 — 진보 담론인가 보수담론인가.”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2』, 401-475. 서울: 책세상.
- 조희연 편.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서울: 함께 읽는 책.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실록) 박정희: 한 권으로 읽는 제3공화국』. 서울: 중앙 M&B.
- 최장집·이성형. 1991. “한국사회의 정치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211-225. 서울: 녹두.
- 홉스, 토마스 지음. 진석용 옮김. 2008. 『리바이어던』(1). 파주: 나남.
-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191-256. 서울: 백산서당.
- \_\_\_\_\_. 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한국사회사학회) 62, 169-203.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Hirschman, Albert O. 1991. *The Rhetoric of Reaction*.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투고일: 2012.02.26	심사일: 2012.03.12	게재확정일: 2012.03.13
-----------------	-----------------	-------------------

【ABSTRACT】

## Park Chung-hee's Political Thought: Illiberal Conservatism for Modernization

Kang, Jung In | Sogang University

Ha, Sang Bok | Mokp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President Park Chung-hee's political thought as the "illiberal conservatism for modernization," by analyzing his books and speeches. To do this, first, his conservatism was examined in terms of anti-communism, the imperativ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nservatism." Then his political thought regarding liberalism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cold war liberalism," "national liberty" and "disregard of individual human rights and liberty."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litical thought was illuminated by the concepts of the "simultaneity of non-simultaneity" which shaped the ideological terrain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

**Key Words** | Park Chung-hee, conservatism, modernizing conservatism, anti-Communism, economic development, Cold War liberalism, national liberty, human rights, simultaneity of non-simultaneity